

여성정책동향

- 국내여성정책동향 (2010년 3/4분기)

문 희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 2010 연구과제 소개

- 여성 박사인력의 교육 - 고용 불일치 실태와 과제
-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 가상시장가치추정법(CVM)을 통한 성인지예산 사업의 편익추정에 관한 연구
-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 인지적 전략

- KWDI 동정 (2010. 7 - 9)

김태현 유덕사

국내여성정책동향(2010년 3/4분기)

문 희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2010년 3분기에는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여성 내부의 차이를 반영해야 하는 여성정책의 정체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이슈가 많이 제기되었다.

미혼모 지원정책의 국가 패러다임 변화 요청

저출산 상황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미혼모 지원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09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혼모 및 재가 미혼모 517명 가운데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는 42.2%, 이미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는 57.8%로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입양을 결정한 이유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34.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열악한 양육환경이 양육을 포기하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렇듯 입양보다는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미혼모 지원정책의 국가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양육 미혼모를 위한 정책과 사회보장제도는 미혼모들의 특수성과 그 내부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양육 미혼모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2만 3,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미혼모 중 시설 이용자가 3,000명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양육 미혼모를 포함한 저소득층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및 학비지원의 수준이 매우 낮고, 양육 미혼모가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임대주택 입주자격 제도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에 여성계와 관련 단체는 미혼모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자립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아동양육비 인상, 가정보육 제도화, 주거시설 확충 및 임대주택 입소 자격요건 완화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 증대

10대 청소년들이 임신·출산으로 학교에서 자퇴하거나, 퇴학조치 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여성가족부, 교육과학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는 한해 약 5,000명~6,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청소년 임신은 연간 약 1만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불법 인공임신중절 단속 방침에 따라 청소년 미혼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과 청소년 미혼모들 중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은 대학진학률이 89.1%에 이르는 한국에서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며, 이는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신낙균 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은 임신 중인 학생,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의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높아지고 있는 미혼모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미혼모의 특수성에 기반한 정책과 더불어 미혼모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철저한 감독 필요

한국에 온 지 7일 만에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에게 베트남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오는 결혼이민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 현재 13만 명에 육박한다. 최근 많은 연구들은 결혼이민과 그에 따라 형성되는 다문화가정의 성공적 국내 정착이 자녀 출산, 산업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올해 미국 국무부가 발행한 인신매매보고서가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인신매매의 위험성을 지적했듯이 다문화가정의 성공적 국내 정착을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결되어야 한다.

2005년 발의된 「결혼중개업 관리에 대한 법률」은 국제결혼 알선업체의 난립과 불법적인 중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업체가 정보 제공의 의무를 다하며,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결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정보 제공의 범위와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아 ‘반쪽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정보 제공 의무 내용은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신상정보 제공 노

력의 의무' 라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 을 마련해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국제결혼 중개 관련 제도개선, 한국인 배우자의 출국 전 소양교육 의무화 및 결혼사증 발급 심사기준 강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점검 강화,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제시한 규제 장치 강화만으로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살해 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불법적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결혼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사전교육 실시만큼이나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국제결혼이 갖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성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결혼으로 한국으로 이주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결혼의 문제를 여성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를 바란다.

군가산점제 부활 움직임에 대한 우려 속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ROTC) 시범 선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계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은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을 칠 경우, 득점의 2.5%를 가산점으로 주되 합격자 상한선을 20%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되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군인권센터는 “군가산점은 위헌 결정을 받은 제도로, 일자리와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여성·장애인·군미필자의 차별을 가중” 시키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소수만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비판하고 “무이자 학자금 융자, 군 복무기간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 등” 제대군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적절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9월 숙명여대를 최초의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ROTC) 시범대학으로 선정했다.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ROTC) 시범대학 선정은 직업군인이 안정적인 직업 중 하나라는 여자 대학생의 인식 변화와 여성 군 리더 배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학의 노력, 출산을 저하로 인한 군병력 부족 해결 및 군 인사개혁 시도를 위한 군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탄력을 받았다.

군대의 여성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이유로 폐기된 군가산점제의 부활 움직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여성 군인의 비율이 높아질 상황을 대비해 남성중심의 군대 문화에 변화가 요청된다.

다양한 집단의 폭력 피해에 대한 관심 및 지원 절실

아동성폭력 문제가 연일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양한 집단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아동성폭력 만큼이나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성폭력 피해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06년 480건에서 2009년 1,177건으로 급증했고, 이 중 약 60%가 지적장애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이다. 이처럼 지적장애인들이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예방대책은커녕 사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 피해자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모호한 관련법 조항도 문제로 지적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가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간으로 규정하지만, 이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와 장애인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대책과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수사기관 및 재판부의 지적장애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과 차별방지를 위한 사회 인식 개선 등 지적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피해자들에 비해 가해자의 처벌강도가 낮고, 이들을 보호할만한 시설도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성인 남성의 경우 군대, 교도소 등 위계가 엄격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2004년 이후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는 남성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약자’라는 가부장사회의 등식 속에서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강간피해자를 ‘부녀’로만 한정한 탓에 남성에 대해서는 강간죄(3년 이상의 징역)보다 법정형이 낮은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최근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에서 남성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 시안을 마련했지만 언제 시행될 지 미지수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만 정책적 관심을 쏟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집단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듣고, 그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이 요구된다.

국회의원의 성희롱·성희롱 발언 예방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필요

강용석 의원과 이강수 고창균수의 성희롱 발언으로 국회의원의 성희롱·성희롱 발언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성희롱·성희롱 발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성희롱·성희롱 발언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선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당직자 등이 참여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구호보다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가해자에 대한 공천금지 등의 제재방안을 구체적으로 당헌·당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화여대 조현옥 교수는 “정치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공천”이라며 “공천을 성희롱과 연계시키면 부적절한 언행은 90% 이상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각 정당 여성위원장과 여성단체 협의체를 만들어 성희롱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제안했다.

성희롱·성희롱 발언의 문제는 단순히 국회의원 품위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의 문제이다. 두 국회의원의 제명·탈당을 통해 모든 정당이 여성인권을 존중하고, 여성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 당헌·당규의 개정을 진행하길 기대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부서 필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법적으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총 234명이며 현재 84명이 생존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위안부 관련 역사 연구는 체계적이지 않고, 지원사업이 피해자들에 대한 복지사업에 국한되어 있다. 지난 8월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진성 서울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자신있는 법적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유엔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및 국제노동기구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에 대해서도 입장을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강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복지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업이지만,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시각과 입장 없이 복지사업에만 매몰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부처 내 전문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생활안정 지원법」이 2002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지원법」으로 개정되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추모·기념사업만이 남게 된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민간에 맡겨 해결할 수 없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해고는 무효

한국철도공사가 2006년 KTX 여승무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라고 밝히고, KTX 전 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승무원들이 파업을 시작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KTX 여승무원 해고 문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업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엔여성기구(UN Women) 출범으로 여성의 역량강화 증진 기대

제62차 유엔총회에서 여성지위향상국(DAW),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유엔국제연구훈련원(INSTRAW), 성문제 및 여성지위향상 담당 특별고문실(OSAGI),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의 4개 기구를 통합한 '유엔여성기구' 발족이 결정되어 2011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는 수년간 지속된 유엔 회원국들 간의 협의와 전세계 여성단체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그동안 유엔은 자금 부족, 통합된 단일 기구의 부재 등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예산 규모가 2억 5,000만 달러(약 3067억원)의 2배에 달하는 5억 달러 수준이 될 '유엔여성기구'의 출범으로 유엔의 성 평등과 여성 역량강화 분야의 자원 축진, 업무효율 강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여성기구'는 여성지위위원회(CSW)와 같은 정부 간 기구들의 정책, 국제기준, 규범의 수립을 지원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이러한 국제기준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요청국에 적절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시민사회와의 효과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유엔여성기구'의 출범으로 지금까지 캠페인 성격에 그쳤던 여성문제가 실질적인 글로벌 아젠다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여성정책은 여성문제를 글로벌 아젠다의 연속선상 위에서 논의하고,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유엔여성기구'와의 관계설정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성 박사인력의 교육-고용 불일치 실태와 과제

- 영문 제목 : Mismatch between education and employment for earned doctorates
- 연구책임자 : 신선미
- 공동연구자 : 김종숙

여성인력의 고학력화로 여성 박사인력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전체 박사인구 중 여성 비율은 17.2%정도이나 2009년에 국내 대학에서 배출된 박사 중 여성 비율은 30.1%이다.

교육과 고용의 불일치란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특성이, 그가 맡고 있는 일자리 혹은 그 인력에 대한 잠재적 수요처가 요구하는 인력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음을 말한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사 이하의 교육-고용 불일치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 연구는 여성 박사의 교육-고용 불일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교육-고용 불일치는 여러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육수준과 직무수준 간의 불일치(소위 “하향취업”)을 연구하였다. 그런데 박사인력의 경우 전공분야와 직무의 연관성이 높으므로, 이 연구는 여성 박사인력의 전공과 직무내용의 불일치 문제도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1) 신규 여성 박사인력의 교육-고용 불일치 규모는 어떠한가, 2) 교육-고용 불일치 상태의 박사인력은 어떤 특징(성별, 전공분야, 직업, 산업, 직장유형, 고용형태, 근무지역 등)을 가지고 있는가, 3) 2008년과 2009년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에 관련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인력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4) 녹색성장에 관련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인력의 교육-고용 불일치 실태는 다른 박사들에 비해 양호한가, 5) 교육-고용 불일치 상태의 여성 박사인력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6) 이미 배출된 여성 박사인력 중에서 교육-고용 불일치 상태에 있는 박사인력의 경력개발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정책방안이 있을 수 있는가이다.

이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1) 문헌조사 분석, 2) 한국교육개발원의 2008-2009년도 국내 일반대학 박사 졸업자의 취업실태조사(전수조사) 원자료 재분석, 3) 2009년도 지역별고용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4) 교육-고용 불일치 경험이 있는 박사인력(남자 500명, 여자 500명)의 불일치 경험조사 등을 수행 중에 있다.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 영문제목 : The Dynamics of Childcare Use and Some Implications for Working Parents
- 연구책임자 : 홍승아
- 공동연구자 : 김은지, 이영미

노동시장내 취업부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취업부모의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취업부모의 일가족양립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녀양육의 문제이며,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고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계기로 지난 20여년간 보육서비스는 획기적으로 확대 공급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보육시설의 이용율과 보육료 수혜율은 크게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전체 영유아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42.8%이며, 이들 중에 보육료지원을 받는 비율은 69%로 나타난다. 이같이 보육정책은 대상층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책도 크게 확충하여 정부의 중심정책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는 중요한 저출산정책임과 동시에 일-가족 양립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보육정책은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서, 저소득층의 보육비용 지원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여성의 취업에 대한 지원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다만 2010년 도입된 보육료지원수준 산정시에 취업부모의 소득산정 완화기준 정도가 있을 뿐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도 부모의 취업유형 및 근로시간대 등 양육자의 수요에 맞춘 서비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공급과 수요 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도 제도적 요건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사업장에서의 의무이행율이 높지 않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취업부모들의 자녀양육 문제는 여전히 개인적인 해결방법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정책대상에 있어서도 영유아보육 이외에 초등학생의 방과후 보육 및 교육의 문제도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 이들의 보호와 안전, 아동발달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동의 방과후 시간사용실태에 의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사설학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공부방 등 사회적 보호에 의존하거나 혹은 보호자 없이 방임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서비스지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을 시설보육과 개별보육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 이용 간의 미스 매칭문제들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하여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상시장가치추정법(CVM)을 통한 성인지예산 사업의 편익추정에 관한 연구

- 영문 제목 : Estimating the Economic Benefits of Gender Budgeting
- 연구책임자 : 조선주
- 공동연구자 : 우석진, 이선행

성별정보를 담고 있는 최초의 법정서류, 『성인지(性認知)예산서』의 탄생

2009년 정부는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하였다(2009.10.). 아울러 올 해는 2010년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 중이며, 『2010년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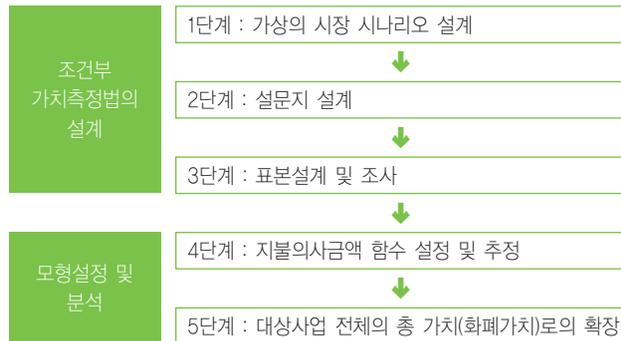
성인지예산제도와 같이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비용과 그에 따른 편익이 발생하며, 그 제도의 시행이 안착됨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제도의 변화는 정부지출의 유효성, 경제적 효율성 및 경제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정책 수혜대상자들의 편익을 추정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본원의 성인지예산센터의 연구는 제도의 초기인 만큼 성인지예산제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정부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지원해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성인지예산 사업(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으로부터 얻는 국민들의 편익을 가상시장가치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으로 추정하는 선도적인 연구로서,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정책 수혜자인 국민들의 성평등 개선의 가치(편익)가 화폐가치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CVM을 이용한 성평등 가치 측정

CVM을 이용한 성평등 가치 측정 과정은 다음의 단계를 거친다. 즉,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성평등이 향상 되면서 국민들의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고 가상시장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이에 따라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지불의사를 측정하며, 대상사업 전체의 총

가치로 확장하는 것이다.



성인지예산, 이제 각론 연구로 제도의 안착과 발전에 기여

여성과 남성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상황, 수요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국가재정운용은 성 불평등한 요소를 지속시켜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성인지예산제도는 세계적으로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양성평등 없이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국가재정을 선진화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지예산서』가 담고 있는 성별정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별을 구분한 도표는 성인지적 예산분석의 출발점일 뿐이다. 『성인지예산서』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각론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착과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확대 및 발전을 위한 이론적 논거 개발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 인지적 전략

- 영문 제목 : Gender, Development and Aid Effectiveness in Korea
- 연구책임자 : 이선주
- 공동연구자 : 최윤정, 정진주, 박설아

2000년 유엔이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을 채택하면서 공적개발원조에 변화가 일어났다. 유엔은 2015년까지 빈곤퇴치를 위해 8개의 MDGs 주요 목표를 설정하면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증가 계획과 결과중심의 사업관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MDGs 달성 노력에 기여하고자 개발원조의 목적을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여로 설정하고 있으나 국제사회가 중요시 다루는 양성평등 이슈는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적개발원조의 기조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 프로그램과 사업에 젠더이슈가 크로스커팅(cross-cutting)되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의 여성 분야 사업은 국내초청연수 위주이며, 보건, 교육, 농어촌 개발 등 기타 사업의 경우는 여성 분야로 분류할 기준이 명확치 않다. 최근 여성 분야에 대한 무상원조 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및 젠더관련 사업에 예산 배정은 아직까지도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성 중립적인 관점(gender neutral approach)의 공적개발원조는 여성을 배제시키거나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 수원국 안에서 또 다른 형태의 성불평등을 양성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여성들을 단순히 개발의 혜택을 수동적으로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남성과 동등하게 개발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등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욕구와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1년 OECD/DAC의 제4차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의의 개최국으로써 한국은 국제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성 인지적 관점으로 ODA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제4차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될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의 중요성과 이행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OECD/DAC의 최근 논의와 정책을 살펴보고, 성 인지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ODA의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KWDI 동정 (2010. 7 - 9)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정책토론회(2010. 8. 26)



- “일본군 위안부,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자”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주소·정부의 역할“을 정진성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성순(한국정신대연구소장) 윤미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박정애(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조시현(건국대 법학과) 강선혜(여성가족부 권익기획과 과장) 강영훈(외교통상부 일본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2010. 9. 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홍일표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으며
- 동 토론회에서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대표는 “가정폭력사건 초기개입과 피해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가정폭력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여성과 아동·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만들기”를 주제로 합동세미나 개최(2010. 9. 8)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3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국토연구원(원장 박양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이명숙)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3개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토론자로는 이한수 익산시장, 정현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이 참여했다.

■ 다문화 가족의 언어·문화적 다양성, 걸림돌인가? 기회인가? 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2010. 9. 9)



- 본 세미나 제1부에서는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소수언어 배경 다문화가족의 세대 간 언어전수 양상과 변화 가능성’을 주제로, 이재분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이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 사례: 결혼이민자 부모의 출산국 언어교육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 했으며
- 제2부에서는 양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여성결혼이민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주제로,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해외의 여성이민자 취업지원 정책’을 주제로 발표 했다